

행정학 기출해설

월비스 김덕관 교수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③	②	①	③	②	①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②	④	①	③	④	④	③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3	재무이론	2
정책이론	4	행정환류	3
조직이론	3	지방자치론	2
인사이론	3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8	생소한 문제	2	100점 방지	0
------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5점 이상
분발대상: 85점 이하

▶ 총평

2년 연속으로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은 실망스럽게도 합격가능한 범위에 있는 분들 간 차별력이 거의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18문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있었던 문제의 결론만 알아도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 약간이나마 생각이 필요한 문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생소한 문제로 분류한 19, 20번도 일부 지문이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없었을 뿐 그냥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행정학 “시험공부”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분들과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주려놓은 “족보”의 결론부터 암기한 분들 간 점수 차이는 명확하게 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행정학 시험에서 확실하게 점수 따는 요령을 잡은 분들과 아직 시험에서 점수 따는 요령이 약간 부족한 분들 간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어 아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러면 ‘행정학 때문에 합격!’은 아닌 행정학은 일단 90~95점 맞고, 다른 과목에서 합격 및 불합격 여부가 나뉘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한 이 출제포인트는 “무엇이, 어떻게” 출제된다고 피 토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젠 제 강의 자료가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라는 족보에 매번 있었으니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있었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합격을 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출문제“부터” 결론을 암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절대 학문을 이해하는 공부와 “시험에서 점수 따는 시험공부” 중,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혼동하지 말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길 바랍니다.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공부”는 시험문제부터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해결과 상관없는 강황한 논리의 이해에 집착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하려는 완벽주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양은 많고 사람은 계속 까먹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주의는 정작 문제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완벽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은 부족하고 양은 많고 사람은 계속 까먹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험문제부터 파악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④ 신공공관리론

<암기용 해설>

-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큰정부’ 추구

<이해용 해설>

- ① (X), ② (X), ③ (X)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는 모두 1930년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켰던 ‘큰정부’와 관련된 개념이다.
- ④ (O) 1970년대 정부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작은정부’를 추구하였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26번(2013 국가9급)]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28번(2013 국가9급)]

신공공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② 정부의 역할은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에 국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 ① 팀제 조직
- ② 위원회 조직
- ③ 매트릭스 조직
- ④ 네트워크 조직

<암기용 해설>

- ③ 매트릭스 조직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

<이해용 해설>

- ③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는 기능구조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환경적 대응성을 결합하려는 조직 형태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765번(2013 교행9급, 2011 국가9급)]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방교부세
- ② 재산임대수입
- ③ 조정교부금
- ④ 국고보조금

<암기용 해설>

- ① 지방교부세
- ③ 조정교부금
- ④ 국고보조금
- ▶ 의존재원

<이해용 해설>

- ① (X), ③ (X), ④ (X)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다.
- ② (O) 재산임대수입은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830번(2019 서울(추)9급)]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수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특성이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암기용 해설>

-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 평정요소와 관계없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

<이해용 해설>

- ①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처럼 근무성적을 평정하기 위한 평정요소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경직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를 선입견에 의한 오류라고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65번(2014 서울9급)]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암기용 해설>

-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효율성

<이해용 해설>

- ① (O) 공익의 과정설은 다양한 사익이 조정 및 타협된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입장으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다고 본다.
- ② (O) 롤스(Rawls)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와 제2원리(기회균등, 차등)가 충돌하는 경우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X)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파레토 최적이란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④ (O)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250번(2012 국회8급)]

<보기> 중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는 파레토 최적 상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 ④ 기계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Tip>

모든 강의에서 조직이론에 대해 배울 때마다 강조해줬듯이 객관식 행정학 문제는 엄청나게 단순화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포인트별로 각각 단편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화된 결론을 임의로 마구마구 연결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 비밀상적 기술 - 유기적 구조, 2. 비밀상적 기술 - 통솔범위 좁음, 3. 유기적 구조 - 통솔범위 넓음, 모두 각각 옳은 내용입니다. 1, 2번은 비밀상적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3번은 유기적 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인데 1, 2번과 3번을 연결하여 모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맥락과 이유가 다릅니다.

<암기용 해설>

-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비밀상적(비정형화된) 기술 : 통솔범위 좁음

<이해용 해설>

- ① (O) 일상적(정형화된) 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문제의 분석가능성은 높아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기계적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
- ② (X) 비밀상적(비정형화된) 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고 문제의 분석가능성은 낮아 업무수행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상관 한 명이 많은 부하를 통솔하기 어려워 통솔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다.
- ③ (O) 공학적 기술은 과제다양성도 높고 문제의 분석가능성도 높다.
- ④ (O) 장인적(기계적) 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지만 문제의 분석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대체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692번(2009 서울7급)]

C.Perrow는 조직의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일상적 기술의 경우 의사결정이 집권화되며 계획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기술에강한행정학 693번(2013 행정간부, 2009 국가9급)]

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 가능성이 크다.
③ 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④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기술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암기용 해설>

- ① 보충성의 원칙 : 지방정부에 우선 사무배분,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만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

<이해용 해설>

- ①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1784번(2017 행정사, 2012 서울7급)]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

- ② 보충성의 원칙

[기술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암기용 해설>

-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 상향식 접근

<이해용 해설>

- ㄱ (X) 정책내용의 결정이 아닌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ㄴ (X) 집행현장의 관료인 일선공무원의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이다.
ㄷ (O) 정책집행 과정을 하위직 관료인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보다 정책내용을 결정하는 고위직 관료인 정책결정자가 주도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ㄹ (O) 정책결정자가 정책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하여 결정된 정책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606번(2007 국가7급)]

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기술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원리 - 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④ 조정의 원리 -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 명령통일의 원리 : 상관은 한 명이어야 한다는 원리

<이해용 해설>

- ③ (X) 명령통일의 원리는 애초에 상관이 한 명만 존재하여 명령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702번(2012 경정승진, 2009 지방7급)]

조직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② 전문화(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흥미상실과 비인간화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 조정의 원리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며 전문화에 의한 할거주의, 비협조 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로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범위가 축소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
- ② 계약제 임용제도
-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암기용 해설>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 직업공무원제는 원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함

<이해용 해설>

- ① (○)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는 직업공무원제가 취하는 폐쇄형 인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② (○)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임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계약제 임용제도는 직업공무원제가 취하는 폐쇄형 인사제도나 강력한 신분보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 계급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정년이 지나기 전까지 승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계급정년제의 도입은 직업공무원제가 취하는 강력한 신분보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④ (×)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강화는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81번(2011 지방7급)]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033번 관련 틀린 선지(2011 국가7급)]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029번(2009 국회9급)]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정부 관료제에 대한 정당 및 정치지도자의 지도력과 통솔력을 강화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 ① 통제
- ② 관리
- ③ 기획
- ④ 감축

<Tip>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는 자세한 도입 스토리까지는 암기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1960대 존슨 행정부라는 것만으로도 기획 중심의 계획예산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③ 기획 : 1960년대 존슨 행정부가 도입한 계획예산제도가 강조한 기능

<이해용 해설>

- ③ 존슨(Johnson) 행정부에서 1965년에 도입한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며, 이는 예산의 기획 기능을 강조하였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05번(2014 군무원9급)]

다음 중 미국 예산제도의 변천순서가 옳게 된 것은?

- ㄱ. 품목별예산
- ㄴ. 영기준예산
- ㄷ. 계획예산
- ㄹ. 결과기준예산
- ㅁ. 성과주의 예산

- ② ㄱ - ㄷ - ㄹ - ㅁ - ㄴ

[2019기출문제해설집 164번(2019 국가9급)]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속성 부족
-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암기용 해설>

-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 ▶ 계급제의 단점

<이해용 해설>

- ① (×) 행정의 전문성 결여는 직업공무원제의 원리에 따라 일반행정가주의를 취하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 ② (○) 한 사람이 하나의 직위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직위분류제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외의 다른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③ (×) 계급 간 차별 심화는 직업공무원제의 원리에 따라 계급 간 보수와 권한에 차등을 두어 계급을 조직 내의 신분과 동일시하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 ④ (×) 직무경계의 불명확성은 직업공무원제의 원리에 따라 공무원이 다양한 업무를 두루 수행하도록 하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036번(2018 서울9급, 2015 국가7급)]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 ② 의회의 국정감사
-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암기용 해설>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 ▶ 내부통제

<이해용 해설>

- ① (×)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 설치된 내부통제 기관이다.
- ② (○), ③ (○), ④ (○) 행정부 외부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외부통제 기관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580번(2019 경찰간부, 2016 국가7급)]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한 것은?

-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 ① BTO(Build-Transfer-Operate)
② BTL(Build-Transfer-Lease)
③ BOT(Build-Own-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암기용 해설>

②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건설(B) ⇨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T) ⇨ 정부는 민간이 임대해 준 운영권으로 운영하고 민간에게 임대료 지급(L)**

<이해용 해설>

②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Build), 건설 직후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며(Transfer), 대신 획득한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해주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Lease) 방식을 BTL(Build-Transfer-Lease)이라고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291번(2012 국가9급)]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BTO방식	BTL방식
ㄱ.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ㄴ.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ㄷ.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ㄹ.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암기용 해설>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 **정책수단의 실현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선행**

<이해용 해설>

ㄱ (X), ㄴ (O), ㄷ (O) 정책평가에서 정책수단의 실현과 정책목표의 달성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정책수단의 실현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선행해야 하고,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경쟁가설, 제3변수)이 배제되어야 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34번(2012 국가9급)]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암기용 해설>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 **비용편익분석 :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화하여 비교 ⇨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 가능**

<이해용 해설>

- ① (X), ② (O) **비용편익분석**은 대안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화하여 비교하는 대안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다.**
③ (O) 할인율이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같은 액수여도 시점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④ (O) 순현재가치(NPV)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을 말한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501번(2017 서울7급, 2008 국가7급)]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암기용 해설>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 **혼합 모형**

ㄷ.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회사모형**

<이해용 해설>

- ㄱ (X)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 모형이다.
- ㄴ (O) 점증 모형은 다양한 참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기득권층의 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 결정에서 약간만 수정되는 결정이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ㄷ (O)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로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를 제시하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의해 만날 때 의사결정된다고 설명한다.
- ㄹ (X)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적 탐색, 조직의 학습 등은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537번(2011 전환특채)]

다음 의사결정모형 중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② 정책을 근본적 결정(큰 결정)과 세부적 결정(작은 결정)으로 나누었다.

[기술에강한행정학 549번(2007 국가7급, 2003 서울7급)]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불완전한 합리성,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중심적 탐색, 표준운영절차 중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③ 회사모형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Tip>

‘조세지출(세금 감면)’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조세지출의 통제)’는 다른 제도이고, 이 문제의 모든 선지가 ‘조세지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의 질문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충분히 회독하신 분들은 이미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매번 그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문과 상관없이 명백하게 틀린 선지인 ④를 골랐을 겁니다.

<암기용 해설>

-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조세지출 방법 : 비과세, 세액공제, 세금감면 등

<이해용 해설>

- ① (O), ④ (X) 조세지출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비과세, 세액공제, 세금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래는 받아야 할 세금이었기 때문에 조세지출 또한 예산지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② (O) 예산지출은 예산을 직접 지출하는 것이라면 조세지출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이다.
- ③ (O)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보조금에 비해 조세지출은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간접지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술에강한행정학 1375번(2009 세무사)]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부문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할 때 생기는 조세수입의 상실분을 말한다.
- ③ 투자세액공제 및 기부금공제 등이 전형적 사례이다.
- ④ 비과세, 세액감면, 보조금 등에 의한 세수결손을 의미한다.
- ⑤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하

문 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Tip>

이 문제에서 그동안 배운 내용인 유비쿼터스 정부는 전자정부 3.0 패러다임이라는 것과 선지 ㄴ이 옳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부분인 선지 ㄱ, ㄷ은 가장 발달한 전자정부패러다임이 전자정부 3.0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옳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용 해설>

틀린 선지 없음

<이해용 해설>

ㄱ (O), ㄴ (O), ㄷ (O) 전자정부 3.0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정부는 지능화된 수요자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하고,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Tip>

민원행정은 그동안 행정학 시험에서 드물게 출제된 주제입니다. 다만, 선지 ㄴ은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술에 강한 행정학)에 옳은 선지와 틀린 선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대비가능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민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선지 ㄱ을 틀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권리구제해달라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지 ㄷ을 옳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물론 용어가 어려워서 이번 시험에서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해결가능했던 문제라는 것과 그 해결 요령을 이번에 배워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 민원행정 : 행정구제수단도 가능

<이해용 해설>

- ㄱ (O) 민원행정이란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행정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해주는 공공서비스이다.
- ㄴ (O)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다른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X) 국민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행정기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이를 처리해주는 것도 민원행정에 포함된다.